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0년 8월 28일
- 제 안 자 : 박갑상, 황순자, 안경은, 윤기배, 배지숙, 이만규, 송영헌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9월 2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년 9월 9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갑상 의원)

☐ 제안이유

-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및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 시설 등에 대한 위임사항,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안 제8조의2 신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 검토기준, 기타 절차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정비(안 제10조)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퍼센트 미만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됨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임사항 변경(안 제17조의2)

-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 변경과 행위제한 완화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조례로 정함

○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가능한 용도지역 확대(안 제78조)

-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하여 공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확대함

○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의 유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명칭 변경(안 별표 3)

- [별표 3] 도시계획에 대한 구·군 권한위임 사무 중 통합·변경된 기반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

□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진성)

○ 안 제8조의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국토계획법(제26조)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도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주민 동의를 득하여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짐.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서류, 보완요구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주민 제안에 대해 시장이 검토할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안제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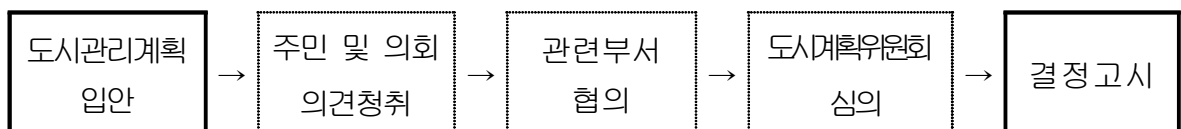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미만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위임된 ‘최대 50%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대상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교)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중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일 경우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됨



○ 안 제17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고자 함

○ 안 제78조 (건폐율의 완화)

상위법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도 공장 밀집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함

○ 안 별표3 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구·군 권한위임사무 중 통합·변경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삭 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통 합)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 '장사시설'

(명칭변경)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고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